

수입농축산물의 오염실태



송 보 경
(서울여대 교수)

1. 글머리 - 수입농산물의 사회적 의미

수입농산물이 우리 사회에 주는 영향을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만 검토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이를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사회·문화구조와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수입농산물의 우리 시장의 출현을 긍정적으로는 우리시장이 세계시장의 상품을 구입할 만한 구매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시장이 이제는 세계 시장구조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로 우리 농산물수입이 경제적인 측면에서이기 보다는 현재 한미간의 고위 정치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문제가 논의되는 것 자체가 이미 경제현안을 넘어서는 영역이라는 것을 뜻한다.

수입농산물은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수입되고 있지만, 예를 들어 미국농산물이 한국시장에 들어왔다는 것의 의미는 그저 단순하지가 않다.

첫째, 수입농산물은 자국농산물과의 경쟁을 뜻한다. 바로 이 점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즉 우리 농산물이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가격면에서 이길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하다. 예를 들면 미국과 비교해서

단위 생산량의 비용이 한국이 훨씬 높은 것은 물론이다. 이처럼 경제적인 가격비교면에서 한국이 열등하기 때문에, 1980년초부터 한국의 고위 정책결정자들과 몇몇 학자들은 시장에서의 비교우위를 내세워 수입상품의 정당성을 주장했던 것이다.

둘째, 농산물의 경우 가격이 가격비교로 끝나지 않는 사회·문화적인 측면이다. 농산물 판매경쟁에서 패배한 농민들과 그들의 작업현장인 농촌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수입농산물로 인해 한국농산물이 판매시장을 잃게 되면 결국, 한국농산물의 생산자인 농민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셋째, 농산물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식량을 포함하는데, 이것을 외국에 의존해도 안전할까 하는 점이다. 세계 시장경쟁이라는 것은 치열한 이해관계의 싸움인데,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쪽이 그것이 식량이라고 해서 치열한 경쟁원리를 벗어날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

농산물이란 식량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써, 다른 일반 공산품과는 다른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식량의 자급률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것이므로 단순한 비교우위론식 발상으

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2차대전 당시의 영국이 식량자급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 이후 지금까지도 경제적으로 손실이 있더라도 식량자급은 확보한다는 교훈을 우리는 유의깊게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논의에서는 이러한 경제·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농산물 수입을 검토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수입농산물 안전성 문제로 제한하려 한다.

위에 지적한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엄연한 사실은 외국농산물이 들어오고 있으며, 그것이 실제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입농산물의 안전성 문제를 우선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무엇보다도 안전성 문제의 중요한 관건은 경제적인 손실은 물량적인 것이므로 손실을 회복할 기회가 있기도 하지만, 위험한 농산물로 인한 인체의 손실은 회복할 가능성이 아주 적기 때문이다. 또한 이 글에서 결론으로는 이 수입농산물을 대하는 우리 소비자들의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인가를 제시하면서 마무리 지으려 한다.

2. 몸말-수입농산물의 안전성 문제

1981년 10월 8일 한 일본신문은 「발암성 과일 수입 금지, 농수산 당국에 항의 쇄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여주고 있다.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발암성이 있는 살충제 EDB를 혼중한 캘리포니아산 감귤류가 8일 오후 요코하마항에 입항하는 것에 항의하는 소비자의 전화가 농무성에 쇄도한다”는 내용이다.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농수산물 수입개방을 했고, 이 수입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의 단면이었는데, 이처럼 수입농산물은 늘 안전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 EDB라는 농약은 1984년 발암물질로 밝혀져서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사용을 금지시켰는데 단, 미국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감귤류에는 사용을 허용했었으나, 최근에는 수출하는 감귤류에도 사용을 금한다고

한다. 이는 위험한 농약사용에 대한 미국의 이중 기준 적용의 구체적인 실례라 하겠다. 미국은 자국내에서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화학물질은 사용하지 못하는 반면에, 외국의 수출은 합법적으로 승인하고 있다.

일본의 소비자들은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약에 관한 정보를 입수해서, 이의 금지를 요청했었다. 신문기사가 보여주듯이 1981년 EDB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일본에서는 88년 10월에 감귤류에 EDB 사용을 못하도록 하였다. 이 일본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위해 화학물질들의 사용의 합법적이나, 불법이나 라는 것은 소비자들의 안전성하고는 무관하다.

즉, 1988년 10월 이전까지 일본 수입과일에 EDB가 사용된 것은 합법적이었는데, 그것이 합법적인 것과 EDB의 위해성의 유무와는 전혀 상관없이 소비자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데 약 8년이 걸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은 위해 화학물질들, 즉 농약·약품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 그 사용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보다는 사용을 삼가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6월 자몽에서의 알라 검출로 인해서, 비로소 수입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농산물수입은 단순한 시장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입증이나 하려는 듯, 이 알라 검출에 대해서 미국대사관이 강력하게 개입하였고, 이것 이후에는 미상원의원에 의해서 언급되는 등 예민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즉 농산물 수입개방도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한국정부가 밀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몽을 통해서 우리 한국소비자들에게 자명하게 보여주었다. 미국은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면, 한 민간단체의 검사발표에도 온 미국의 관심이 합세하여 대처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유의깊게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수입농산물에 대한 대처는 어떠한가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역체계가 미흡하다. 알라

검출 이후에야 비로소 관심이 생긴 것처럼 그 점에는 정부가 수입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보여진다. 발암농약 문제제기 이후에 농림수산부와 보건사회부가 이것이 누구의 소관이나로 따지기 시작해서, 수입농산물의 잔류량 검사는 보건사회부가 하기로 결정을 보았다.

그러나 수입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무방비상태는 발암농약물에만 노출되었던 것이 아니고, 아플라톡신이 함유된 옥수수와 체르노빌 방사능 낙진 오염지역에서 수입된 토마토케첩의 원료와 분유의 원료인 카제인나트륨의 수입으로도 나타났다. 관계당국은 아플라톡신이 함유된 옥수수를 안전한 옥수수와 혼합해서 사용했으니 안전하다는 대답으로 넘어갔고, 분유원료에서 검출된 방사선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안전하다고 간단하게 지나갔다. 바로 관계당국의 그런 대처들이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아플라톡신이 함유된 옥수수를 발견했으면 그것도 폐기 처분했어야 한다. 왜냐하면 아플라톡신은 강한 발암물질이어서, 다른 옥수수와 혼합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방사능에 오염된 분유원료만 해도 그 정도의 수준으로 안전하다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들어 올 가능성이 있는 방사능 낙진 오염지역에서 들어오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카제인나트륨 이후에도 최근 보건사회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네덜란드에서 수입한 코코아프리퍼레이션이 1989년 8월 22일 검사에 의해 148버큐렐(Bg/kg)이 검출되었다. 이 코코아 프리퍼레이션은 초코렛을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점은 1986년 4월 26일 새벽 1시 26분에 발생한 체르노빌 핵발전 사고의 영향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있다는 점이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유럽국가들은 세계적으로 방사선 오염 농산물이 문제가 되자, 그 당시에는 판매를 보류했다가 참고에 보관했던 오염농수산물을 서서히 제3세계로 수출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바로 이 점은 1988년 영국의회에서 문제가 되기도 했으며, 영국 하원 식품위원회에서는 영국은 방사선 오염식품을 수출하지도 말고 수입할 수 없도록 철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결론짓기도 한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1989년 오늘도 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로 오염된 농산물을 수입할 수 있다는 것을 최근의 보건사회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가 증명해 준다는 점이다. 물론 148버큐렐(Bg/kg)은 우리나라의 허용기준치 370버큐렐(Bg/kg)으로는 합법적인 수준이다. 그러나 합법적인 수준과 인체의 유해성 여부는 별도로 수 있다는 점을 소비자들은 항상 유의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위해농약이 함유된 농산물이 수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산물 수입개방의 역사가 짧아 축적된 자료가 없어 일본의 것들을 몇 가지 참고로 살펴보기로 하자.

감귤류와 제리 등을 일본의 수입선과 비슷하므로 한국의 경우는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일본에서는 앞에서 지시한 EDB가 1984년 케익믹스와 소맥에서 각각 69ppb와 140ppb가 검출되었다. 또한 바나나와 건조바나나쥬에서도 취소한 청산 등이 검출되어 논란이 된 적이 있으므로, 우리도 항상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일본의 자료 뿐만 아니라, 미국의 자료에서도 자몽, 오렌지, 레몬 등 감귤류에 사용되는 농약이 1988년 자료에 의하면 80여가지 이상이 등록되어 있다. 최근에 알라보다 더욱 강한 농약인 마에쓰리는 농약도 미국에서 감귤류에 사용이 허용되고 있는 것을 나타냈다.

또한, 발암농약은 이 뿐만 아니라 디코폴도 사용이 허용되는 등 수입감귤류는 화학물질의 각테일이라고 표현되어도 어색함이 없겠다. 여기서 또한 유의할 점은 이 한가지 한가지 농약들은 안전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혼합해서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연구도 없다.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의 반응에 대해서 연구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농약이나 홀몬제의 과다사용 등으로 위해할 수도

있는 농산물 수입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정부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수입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성 검토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필리핀산 바나나수입은 정식으로 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본의 소비자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필리핀의 바나나 농장에서는 필리핀에서 조차 금지된 농약들을 불법으로 마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사후처리보다도 사전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수입농산물의 수입이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정부와 소비자는 이에 대한 대처를 철저히 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은 물론이다. 혹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농산물에도 농약이 마구 사용되므로 수입농산물이나 우리농산물이 다를 것이 없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며, 바로 알라 농약의 검출을 두고 외신기자들이 소비자단체에게 왜 한국산 농산물은 문제삼지 않고 수입농산물만 문제로 삼느냐고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

첫째, 한국의 농산물에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한다고 해서 수입농산물에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해도 좋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둘째, 수입농산물은 자국의 농산물보다 화학물질을 더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과일의 경우 운송도중 부패를 막기 위해서 화학약품 등을 사용할 기회가 많고, 자국에 들어와서는 안되는 해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처리하기 위해 여러가지의 소독방법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일본에서 문제가 되었던 매칠브로마이드가 바로 이 소독과정에 사용되는 훈증제인 것이다.

그 밖에 외국농산물, 특히 과일에 있어서 신선도와 비타민의 파괴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몇주 혹은 몇달씩 소요되는 과일의 신선도는 화학물제의 처리로 신선하게 보일 뿐이지 이미 신선도는 사라졌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비타민의 파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소비자들이 안전성과 과일의 영양을 생각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이다. 밭에서 가까울수록, 수확한 날짜와 가까울수록 영양의 손실은 적다.

3. 글 마무리

요약하면, 수입농산물의 경우 소비자들이 다음의 몇 가지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수입농산물의 안전성은 보장이 된 것인가?

둘째, 만약 내수 수입농산물, 특히 수입과일을 구입한다면 우리나라 농민들의 삶의 터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셋째, 만약 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농촌을 떠난다면 그들이 재적응할 때까지의 비용을 누가 지불할 수 있을 것인가.

넷째, 만약 우리의 농촌이 황폐화 된다면 우리의 식량자급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섯째, 우리의 이웃은 농민들의 삶의 터전이 흩어졌을 때 우리의 삶의 터전은 이와는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이처럼 수입농산물의 문제는 화폐단위로만 계산하기 어려운 깊은 사회문화 구조와 연결되기 때문에 단순한 결론을 짓기 힘들다. 도시의 소비자들은 수입농산물 선택에 앞서 앞에 지적한 몇가지 점을 꼼꼼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건포도의 선택이 우리 포도 농가들의 삶의 터전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간단한 사회구조를 깊이 이해했으면 한다.

끝으로 정부는

첫째, 수입농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검역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셋째, 특히 수입되기 전에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수입농산물을 선택하는 철학과 안목을 분명히 해야 소비자도, 그리고 우리의 농민도 안전하다는 점이다. 